

2MB 공안탄압 맞대응 '비상국민행동' 발족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10.15 18:08

94개 단체 모여 공안기구 감시, 국회 입법 상황 모니터 사업 등 공안탄압 현안대응 나서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안탄압'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9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 행동'(비상국민행동)이 발족됐다.

[표시작]<center></center>

△날이 갈수록 이명박 정권 폭력이 난무한다. 누리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민주수호, 촛불탄압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을 발족해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표끝]

민주노총도 소속된 비상국민행동은 15일 오전11시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촛불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온 사회를 국가보안법과 공권력의 공포 아래 지배하며 언론과 광장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갖 성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다"며 "집시법을 개악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장을 철거한 관리 하에 두려 함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방법을 개악해 시민들의 소통을 검열하려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를 확장해 온 사회를 빅브라더의 감시 아래 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박래군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외치지만 공안기구들은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본질로써 '촛불에 대한 이성을 잃은 복수극' '폭압기구인 공안기구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포석'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운 공포정치의 조장'이라고 개괄 규정했다.

네티즌 대표로 나온 '오만과 잡소리' 씨는 '법률에 조차 근거하지 않은 폭압수사'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긴급체포(채증사진 속의 마스크를 쓴 인물과 주민등록상 사진이 비슷해 보인다는 모호나 정황만으로 긴급체포했다가 오인한 것이 드러나 10시간 만에 석방) △소환 이유와 신분을 미고지하거나 거짓 통보해 피의자 방어권 무력화(이미 조사를 받고 풀려난 피의자에게 '조서에 지장이 안 찍혔다'는 이유를 대며 다시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라고 말을 바꿈) △조사 중 인권침해(휴대전화 사용 금지, 밤샘수사 강요와 비윤리적 협박 동원 등 무리한 수사, 없는 배후조직 짜맞추기 수사 등) 등 사례를 들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나온 장여경 씨는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촛불시위가 사그라들면서 본격적으로 촛불시위 참가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누리꾼 '권태로운창'을 투석혐의로 체포 구속하고 사망설 광고 네티즌에 대해 모금액 횡령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촛불시위 흠집내기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 통제정책 본격 도입에 대해 우려했다.

각종 공안탄압 사례, 공안기구 감시, 국회 입법 상황 등 모니터 사업 등 공안탄압 현안대응을 하게 될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8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네티즌 단체 플래쉬몹, 자전거 행진, 캠페인, 사이버 행동 등을 벌이고 25일 '민주주의 페스티벌' 행사 때에는 각종 공안탄압 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연속기획 토론회로 각종 공안탄압(집시법, 인터넷통제,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4차례 토론회와 2차 공동행동을 벌이고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12/1)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12/10)을 맞아 이 기간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공동행동으로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독후감 공모전, 인권침해 고발대회, 촛불문화제, 행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